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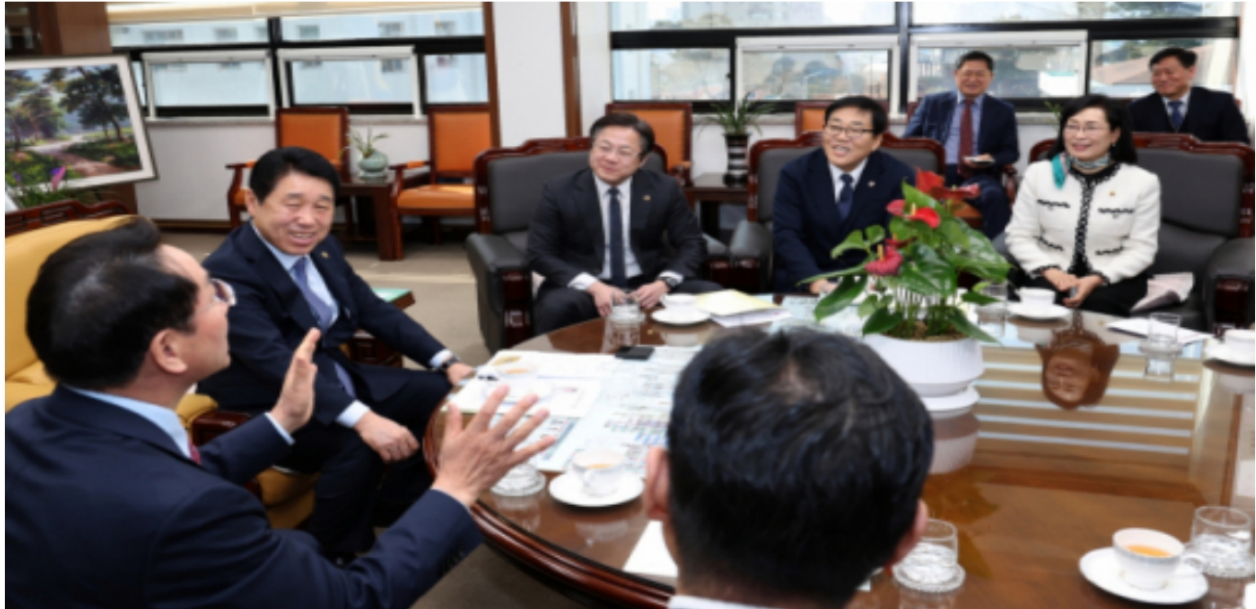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 03 14 ()

江原日報

강원자치도의회.인천광역시 관광분야 등 공동
협력방안 논의

강



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 김기홍 부의장, 심영곤 운영위원장, 양숙희 의원 등은 13일 의장 집무실에서 강원자치도를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업무협력을 위한 환담을 가졌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이 13일 의장 집무실에서 강원자치도를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업무협력을 위한 환담을 가졌다.

이번 환담에는 김기홍 부의장, 심영곤 운영위원장, 양숙희 의원, 유용수 인천시 행정국장 등이 참석,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강릉 정동진과 인천 정서진 간 일출·일몰과 연계한 관광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강원과 인천은 동해와 서해의 항구와 경제자유구역 설치 등 공동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자치단체”라며 “의회차원에서도 인천광역시의회와 교류관계를 확대해 지방분권과 공동현안사업에 대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원도의의회.인천시, 업무 협력 방안 논의



(춘천=연합뉴스) 13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왼쪽)과 권혁열 의장이 업무 협력을 위한 환담을 하고 있다. 강원도의의회와 인천시는 강릉 정동진과 인천 정서진 간 해돋이.해넘이를 연계한 관광 분야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4.3.13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3 14 ()

22



도의회 권혁열 의장 인천시장 환담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권혁열 의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13일 도의회에서 환담을 갖고 강릉 정동진과 인천 정서진 간 관광분야 협력을 약속했다.

사진제공=도의회

江原日報

2024 03 14 ()

21

강릉향교 춘기석전대제

◇권혁열도의회장(강릉)은 14



일 오전 9시40분
강릉향교 대성전
에서 열리는 강
릉향교 춘기석전
대제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4 03 14 ()

22



양숙희 도의원 우수 지자체 의정대상 강원특자도
의회안전건설위양숙희의원은 13일 서울프레스센
터에서 열린 '2024우수지자체 의정대상'에서 의정
발전 및 지역사회공헌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42

스포츠서울

2024 03 13 ()

양숙희 강원자치도의원 '2024년 지자체 의정
대상' 수상

사진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의원(국민의힘 춘천6)은 13일(수) 시사대한뉴스 주최, (사)대한노인회중앙회와 (사)서울시민회가 주관하는 '2024 우수 지자체 의정대상'에서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공헌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양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방의정 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 성장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지난 1년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 주민 밀접 조례를 제 개정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양 의원은 "지난 1년간 주민들과 소통하며 강원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뜻깊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도민들이 더 쾌적하고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acdck4021@sportsseoul.com

2024 03 14 ()

ms투데이

‘외국인’ 강원도민 계속 느는데?“지원 정책은 부실”

진광찬 기자

도내 외국인 수 10년 새 2배 이상 증가
 농촌지역·기업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 늘어
 도 외국인 정책 TF 구성, 인력 4명뿐
 최승순 도의원 “강원도형 비자 특례 담아야”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전담부서 인력 확충, 강원도형 비자 구축 등 외국인 거주민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민의힘 최승순(강릉5) 강원특별자치도의원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외국인 수는 2만4000명으로 10년 전(1만400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은 도내 시군은 원주(5751명)였고, 춘천(5001명), 강릉(3945명)이 뒤를 이었다. 국적별 비율로는 베트남이 22.1%고 가장 많았고, 한국계중국인(11.15%), 중국인(9.4%) 등 순이었다.

외국인 체류 자격별 인원을 보면 고용허가제(E-9)가 50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학 비자(D-2)가 4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강원지역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유학 온 경우가 주를 이룬 셈이다.

도내 인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농촌지역이나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수요 조사를 통해 배정된 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지난해 대비 15% 증가했다. 춘천 관광리에서 오이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도내 청년들이 농사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매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한 해 농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강원지역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하지만, 강원지역 외국인 지원 정책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빈약하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광역·기초지자체 제3차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2018년~2022년)을 보면 강원지역 사업은 총 61개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26개), 부산(27개), 광주(66개)에 이어 네 번째로 적다.

이마저도 대부분 십여년 전 만든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고, 최근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은 드물다. 춘천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 시티투어 정책’ 단 1개뿐이었다.

도 차원의 외국인 전담부서 구성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는 지난해 12월 외국인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담부서를 마련했는데, 인력 구성은 4명뿐이다. 반면, 경북은 관련 부서에 13명을 배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치 활동도 활발히 나서고 있다.

최승순 도의원은 “외국인은 도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동반자로 여겨져야 하는데, 강원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도 차원에서 관련 부서의 인력 확충을 통해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강원특별법에 강원도형 비자 등 특례를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균형발전과 외국인정책 TF 관계자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를 제외하면 외국인 정책 관련 국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외국인들이 강원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강원도민일보

2024 03 14 ()



¹⁶
강정호(속
초) 도의
원은 14일
오전 10시
속초시 농

협 하나로마트에서 열
리는 제51회 대한노인
회 속초시지회 정기총
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14 ()



¹⁶
에 참석한다.

진종호(양양·왼쪽)
도의원·조영호 양양
부군수는 14일 오전
10시 양양향교에서 열
리는 춘기석전제 봉행

강원도민일보

2024 03 14 ()



14
김길수(영
월) 도의
회 기획행
정위원장
은14일오

전 11시뉴동해관광호텔에서 열리는 도새마을회 제18·19대 회장이 취임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14 ()



12
장·유순옥(비례) 도의원은 14일 오전 11시 뉴동해관광호텔에서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 18·19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심규언 동해시장(위 왼쪽)·최재석(동해·위 오른쪽) 도의원·심영곤(삼척·아래 왼쪽) 도의회 운영위원

2024 03 13 ()

江原日報

[포토뉴스]삼척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이 13일 삼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삼척시니어클럽 주관으로 박상수 시장, 조성운 도의원과 일자리 참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이 13일 삼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삼척시니어클럽 주관으로 박상수 시장, 조성운 도의원과 일자리 참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이 13일 삼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삼척시니어클럽 주관으로 박상수 시장, 조성운 도의원과 일자리 참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4 03 14 ()

강원도민일보

02

정부부처 강특법 개정안 난색, 윤 대통령 “규제완화” 잇박자

국제학교 등 3차 특례 불수용

첨단산업 지원 약속 기대 속

지역 형평성 논란 제기 전망

“권한 이양 등 전향적 검토를”

정부 부처가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소멸 대응에 방점을 찍은 강원특별법 3차 입법과제안에 여전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등 특례안 관련 작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 부처의 이 같은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 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정부지원’을 강조한 것과 배치돼 정부 부처가 강원도 특례 적용과 권한 이양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본지 취재 결과,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강원지원과는 지난달부터 정부 부처와 강원도 간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협의를 주관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달 27일 교육부와 마주앉았는데 이어 이번달 12일과 13일 이틀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각 부처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핵심 특례를 논의했다.

이번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 부처 협

의에선 쟁점 특례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국제학교 설립을 비롯해 러닝메이트 시범도입, 외국인 체류요건 완화, 다목적댐 초과이익 환수 등이 다. 정부 부처는 특례 대부분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도관계자는 “특례 관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각 정부 부처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 부처의 기조가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읽힌다. 지난 11일 대통령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완화와 강원도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안보, 경제, 안전, 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강원엔 큰 빛을 지고 있는 만큼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은 지키겠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첨단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강원도가 마련한 3차 개정 입법과제안의 70여개 특례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다목적댐의 초과이익 환수 특례가 대표적이다. 이 특례는 댐 사용권자가 건설비용을 초과한 수익금을 얻으면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댐 수익금 관련 자료는 강원도에 제출하도록 했다. 소양강

댐 준공으로 강원도와 주민이 겪은 피해를 정부가 적정히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원특별법 특례와 관련해 지역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외국학교법인의 교육기관 설립 특례를 담은 부산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공언하면서다. 교육부 등 정부 부처는 강원특별법의 국제학교 특례에 대해 ‘귀족학교’와 ‘공교육 가치 훼손’ 등을 들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차 개정 당시에도 강원국제학교 설립 특례안은 제외됐었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4 03 14 ()

05

“일주일에 한 번만 진료 봅니다” 시골 보건소 피해 현실화

르포 | 공보의 차출 운영 차질 보건지소

삼척 미로보건지소 1명 파견

인근 보건지소 공보의 순회 진료

의료공백 대책 요원 주민 불안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국 각 지역 공중보건의(공보의)가 차출되면서 강원도 농어촌 공공의료 책임지는 보건소 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13일 오전 삼척시 미로보건지소 입구에는 평상시 못보던 안내판이 눈길을 잡았다. 안내판에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매주 수요일만 진료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삼척지역 공보의 8명 가운데 미로보건지소에서 근무 중인 공보의 1명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차출되면서 미로보건지소는 내달 7일까지 한달여간 매주 수요일 하루만 의과 진료를 보게 됐다.

수도권 등 큰 도시에서만 문제일



정부의 지역 근무 공중보건의의 차출 조치로 인해 삼척 미로보건지소 공보의 1명이 파견된 가운데, 13일 보건지소 입구에 매주 수요일 하루만 진료를 본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것으로 인식해온 주민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처가 시골마을을 공공의료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못했다는 반응이다.

이전에는 인근 신기보건지소 파견 근무일인 화요일을 제외하고 월·수·목·요일 등 주 4일 운영됐다. 신기보

건지소에서 한방만 운영하다 보니, 미로보건지소 의과 공보의가 매주 한 차례 파견 근무에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1일 미로보건지소 공보의 1명이 차출되자 지역 공공의료 공백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공백은 근덕·노곡 보건지소 공보의가 채우

는 방식으로 일부 운영 계획이 변경됐지만 자칫 의료공백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요원한 실정이다.

한 주민들은 “의료공백 사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달간만 공보의가 자리를 비운다는 말을 어떻

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걱정했다.

근덕 보건지소 공보의는 앞으로 한달여간 매주 수요일마다 미로보건지소로 파견 근무하고, 노곡 보건지소 공보의는 매주 화요일마다 신기 보건지소에서 근무한다. 미로 주민들은 모두 1700여명으로, 겨울철 환절기 등에는 적지 않은 환자들이 지역 보건지소를 찾아 치료를 받고 있다. 평상시에는 하루 평균 10명 안팎의 주민이 찾고 있지만, 어르신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고혈압과 당뇨, 관절 등 만성질환자들이 적지 않아 공보의 공백 현상이 지속될 경우 주민 불편은 불가피하다.

주민 A씨는 “농번기인 요즘 일주일에 한 번만 보건지소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 공공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보의 B씨는 “공보의 입장에서 어디에서 근무하던 근무 시간은 달라지지 않지만, 주민들은 항상 있던 공보의가 없는 것만으로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속히 이번 사태가 해결되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구정민

강원도민일보

2024 03 14 ()

02

“강원 유니콘 기업 배출”글로벌 혁신 특구 정책협의 가동

정부-지자체 협의회 준비상황 공유
도, AI헬스케어 첨단 실증단지 조성

강원특별자치도의 AI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혁신 특구’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회가 본격 가동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원주의료기 기테크노밸리에서 강원도를 비롯, 글로벌 혁신 특구에 선정된 4개 광역시·도와 ‘글로벌 혁신특구정책 협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는 네거티브 규제 특례 관련 관계부처 협의의 경과, 실증안전성 확보방안 및 실증인프라 구축 계획 등 지자체별 글로벌 혁신 특구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구 준비현황 발표에서 강원도는 ‘AI헬스케어 기반의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분야 초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유니콘기업 1개 육성, 100개 기업 유치, 수출액 2291만 달러 및 신규고용 1400여명 달성을 추진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완성형 AI헬스케어 국내·외 첨단 실증단지 조성, 해외 AI헬스케어 공동 R&D, 글로벌 분산형 임상 참여 시스템 연구개발, 글로벌 비대면

진료 지원 플랫폼 연구개발이다.

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지원 플랫폼으로 정밀 의료 서비스 실현과 환자 중심의 의료 제공이 기대된다”며 “여기에 분산형 임상 시험 틀을 도입, 고품질 임상 시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AI헬스케어 기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 도에서 유니콘 기업을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AI헬스케어 기업들의 개발 기기에 대한 혁신수가 도입 및 재정 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대표적인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이 적용되고 글로벌 실증까지 연계되는 특구로 발전시키기 위해 준비 단계부터 지자체 수요를 최대한 수용, 이에 맞는 최적의 정책 매트릭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혜민

강원도민일보

2024 03 14 ()

12

태백시 동서고속도로 태백IC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서
도로 개선·폐기물 규제 개선 약속
시, 경석 처리 등 모든 역량 집중

영월~삼척간 동서고속도로 태백 IC
유치를 비롯해 1900만t에 달하는 탄
광 폐석 등 경석 처리 등 지역 현안 해
결에 태백시가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서 주목된다.

태백시는 수십년 교통오지에서 벗
어나기 위해 동서고속도로 예비타당
성 조사 통과와 더불어 태백IC 유치

를 위해 전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 가행 탄광에서 발생
한 폐석이나 폐광 찌꺼기, 저품질 광
석 등 경석 1900만t을 처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강원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
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의미 있는
발언을 하면서 지역내 환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
서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영
월~삼척 고속도로도 잘 쟁취 산간 지
역 주민들의 삶을 크게 개선시키겠
다”고 약속했다.

동서6축 고속도로는 지난 1997년
착공한 이후 18년만인 2015년 평택~
제천 구간(127.3km)이 연결됐고, 지
난해 영월~삼척 구간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
됐다.

이에 태백시는 지난 2015년부터
해당 자치단체와 함께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 동서고속도로
조기 개통과 태백 IC 유치를 지속 건
의하고 있으며, 이번 윤 대통령의 언
급에 힘을 받아 동서고속도로 전 구
간 동시착공 및 조기 준공, 태백IC 유
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태백시는 또 지역 전역에 적치돼
있는 1900만t 분량의 경석 처리를 위
한 대체산업 유치 및 육성에 집중하
고 있다. 시는 10년 전부터 석탄 경석
을 활용해 경량골재, 투수블록, 세라
믹 원료 등 다양한 신소재 대체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석열 대통령은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폐광지역 석탄 경석이 폐기물로 취
급돼 지역 재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
다”며 “석탄 경석이 건축자재로 활용
되도록 폐기물 규제를 개선해 신산업
육성 및 지역 재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열

江原日報

2024 03 14 ()

15

도암댐 수질개선 4개 시·군 주민 공동 대응

정선·영월·제천·단양 지역 시민단체 업무 협약
화학약품 사용 반대·하류 피해 대책 힘모으기로

【정선】도암댐 발전 방류로 인
해 생태계 훼손과 수질 오염을
겪었던 정선과 영월, 충북 제
천, 단양 등 4개 시·군 시민단
체가 함께 현안 해결을 위해 힘
을 모은다.

정선군변영연합회는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상길 연
합회장을 비롯한 엄삼용 동서
강보존본부 상임이사, 이상학
맑은하늘 푸른제천 시민모임
대표, 이보환 예코단양 대표 등
남한강 상류 4개 시·군 시민단
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

한강 상류 송천 수계 수질 개선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암댐 하류 주
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도
암댐 내 화학약품 사용을 통한
수질관리를 반대하며 댐내 퇴
적물 처리 방안과 수질 개선,
하류 지역 주민 피해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에 공동 대응하
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참석 단체들은 한

국수력원자력이 도암댐 내에
미검증된 수질개선제 ‘제올라
이트’를 사용하거나 전기 생산
을 목적으로 유역변경 방류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감시 및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또 2005
년 국무조정실 제131차 국정
현안정책조정 결정사항 이행
을 촉구하기로 했다.

전상길 정선군변영연합회장
은 “도암댐 물을 유역 변경해

발전방류를 한다면 남한강 최
상류는 유량 감소로 인한 수질
악화와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
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엄삼용 동서강보존본부 상
임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남한강 최상류부터 맑고 깨끗
한 물이 수도권으로 공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김영석기자 kim711125@

江原日報

2024 03 14 ()

02

“춘천 국가보훈광장 건립 추진”

속보=춘천에 국내 2호 국가보훈광장 건립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강원도를 방문해 춘천대첩을 기리는 보훈시설 건립을 약속(본보 지난 12일자 3면 보도)한 만큼 올해부터 국비 반영 및 기본구상 등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국가보훈부는 2027년까지 120억원을 투입해 춘천에 6·25 첫 승전보인 춘천대첩을 모티브로 한 국가보훈광장 조성 사업을 논의 중이다. 장소는 의암호변이 거론되고 있으나 강원자치도는 춘천시와 협의 및 여론 수렴 등을 거쳐야 해 아직은 유동적이라

道·보훈부 조성사업 검토
세종시 이어 전국 2호 광장
120억 투입 의암호변 유력

는 설명이다.

증강현실(AR)로 춘천대첩 당시 전투상황을 재현하고 첫 승전을 기리는 상징물을 조성해 보훈과 교육, 관광을 결합한 형태의 광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가보훈 기본법상 현충시설은 국가직접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업이 확정될 경우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지역 민생토론회에서 “춘천대첩에서 6

일 동안 인민군의 발을 묶어놓은 덕분에 대한민국이 지켜졌다”면서 “춘천에 보훈 기념시설을 건립해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보훈부에 내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위한 국비 3억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내 1호 국가보훈광장은 지난해 세종시에 1만8,590㎡(약 5,633평) 규모로 조성됐다.

도 관계자는 “낙동강 전투, 인천 상륙작전과 달리 춘천대첩을 기리는 대표적인 기념관이 없다”며 “춘천대첩을 재조명하는 국가보훈광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3 14 ()

/ 19

강원에 정착하는 인재 육성을

-대성고 70년故 장운 교장 '지역교육' 되새기는 계기로

원주 대성고 초대 장운 교장(1927~2024)이 3월 12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춘천, 강릉에 비해 교육여건이 불리했던 원주에서는 광복 이후 민간 차원에서 남녀 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열망이 반영된 결실 중 한 곳이 대성학원이며, 장일순 초대 이사장과 장운 초대 교장 역할이 컸습니다.

대성학원은 한국전쟁 중인 1952년부터 지역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자산을 내놓으며 1954년 장일순, 장운, 김재욱, 김종호, 이종덕, 한명희 등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민족의 양심을 살리고 나라를 일으키는 주역을 양성하는 목적과 함께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원주지역의 가난한 청소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취지가 컸습니다. 당시 원주엔 실업학교인 원주농고만 있어서 인문계 고교로 진학하려면 춘천이나 서울 타 도시로 유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학교명 '대성'이 독립운동가 안창호 가세한 대성학교에서 따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거짓, 공리공론, 불신, 비겁을 배격했던 안창호의 교육관 영향으로 대성고의 첫 교훈은 '참되자'였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주역으로서의 시대적 과제는 1960년대

반독재 활동으로 나타났습니다. 1960년 4월 이승만 대통령 하야 담화 발표 때 대성고와 원주고, 육민관고, 원주농고 학생 500여명이 결집해 환영 및 경찰 간섭 배격 시가행진을 펼쳤습니다. 1965년 4월 2일에는 대성중·고교 학생들이 전국 고등학생 최초로 한·일 굴욕 외교 반대 시위를 집단적으로 전개하며 시대적 과제에 앞장섰습니다.

원주 첫 인문계 고등학교 운영을 위해 대성학원 설립인가된 것이 1954년 3월 24일이고, 대성고 개교일은 5월 7일로 70주년을 앞둔 시점이라서 지역 교육과 인재양성에 대한 남다른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심화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아야 하는 것이 최대 현안이 됐기에 더 그렇습니다.

과거 지역을 떠나 서울 명문대에 들어가는 입신양명, 출세하는 것이 인재상이었다면 지금은 강원도 정착해 함께 호흡하는 인재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일례로 강원도내 의대에 강원 학생이 소수 입학한 결과 의사 인력을 조달하지 못해 공공의료원 진료과목이 폐지돼 의료서비스가 악화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70년 전 대성학원 설립과 마찬가지로 지역인재 창출에 지역사회 역할을 다잡아야 할 때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3 14 ()

/ 19

외국인 지원센터는 선택 아닌 필수

-도내 유일 원주 공모 탈락, 한국어 교육 등 차질

강원지역 유일의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인 원주 외국인 주민지원센터가 올해 초 정부 공모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도내 장기체류 외국인이 2만 4000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주민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원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공모사업 탈락은 도내 외국인 정착을 위한 정책에 역행하는 아쉬운 결과입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원센터가 지금 존폐의 갈림길에서 있습니다. 강원도는 자체 예산편성을 통해 도차원의 외국인노동자 정주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지만,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운영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사업' 우선 협상 대상 자치단체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김해, 경상남도 양산, 경상남도 창원을 선정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원주외국인 주민지원센터를 운영 기관으로 삼아 신청했지만 실패했습니다. 18억 원을 투입해 지자체 주도의 외국인 근로자 정착 사업을 지원하는 이번 공모에는 전국 22곳의 지자체가 신청, 9곳이 선정됐습니다. 경남의 경우 3곳의 기초지자체가 포함된 반면, 강원은 사회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유일의 기관을 기반으로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과 탈락한 지역이 외국인 정착 지원의 양과 질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선정 지역은 각종 지원프로그램이 진행돼 외국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지역은 지원센터 존폐를 걱정해야 합니다. 정책의 성격상 상설 기관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지역마다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들이 정주할 여건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역의 외국인 이탈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주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는 매주 토·일요일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수강생 155명 중 43명은 원주 이외 지역에서 원거리를 마다하고 찾아오는 등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자연장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은 지역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책의 성격상, 공모를 통해 특정 지역만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지원 기능을 확대해 상시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4 03 14 ()

/ 19

과일 값도 외식비도 '천정부지', 끝없는 물가 고통

과일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 2월 강원특별자치도 내 과일 물가 상승률은 35.9%로 도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1%)보다 32.8%포인트 높았다. 2002년 2월 33.7%포인트의 격차가 발생한 이후 22년 만에 가장 컸다. 과일 가격 인상의 제일 큰 요인으로 이상 기온에 따른 수확량 급감이 꼽힌다. 2023년 10월 사과 물가 상승률은 70.2%로 1993년 3월(67.3%) 이후 최고치였다. 알이 굵다 싶으면 개당 5,000원짜리로 이제 '금(金)사과'인 셈이다. 우리나라 사과 가격이 현재 전 세계 1위라고 한다. 그럼에도 가격 안정세는 요원한 분위기다. 올 7월 나오게 될 햇사과마저 작황이 부진하다면 적어도 올 추석 전까지는 사과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사과 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대체재인 다른 과일 가격마저 오르며 각종 기록을 쏟아내고 있다. 배(65.8%), 복숭아(43.3%), 감(46.4%), 귤(68.8%) 등의 가격도 덩달아 고공행진 중이다. 다른 품목에 비해 과일 물가 부담이 늘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들 과일 역시 가격이 내려가기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종합포털을 살펴보면 1년 전과 비교

해 도내 외식 가격 상승세도 뚜렷했다. 조사대상 메뉴 8개 품목 중 8개 가격이 지난해 2월보다 비싸졌다. 평균 인상률은 4.2%에 달한다. 주춤했던 물가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 3%대에 재진입했다. 과일 값 강세가 지속되고 유가 하락 폭이 줄어든 영향 때문이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계상 3.1%지만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지수는 3.7%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3.8%나 됐다.

물가의 압도적 상승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장을 보거나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일이 두려워질 만큼 물가 압박이 크다. 게다가 4월 총선을 의식해 유류세 인하 연장과 전기·가스요금 억제 등을 통해 미뤄둔 물가 인상 요인들이 잠재돼 있어 갈수록 물가 부담은 심해질 수 있다. 총선 이후 물가가 더 걱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올 1월 2%대로 둔화됐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되돌아왔다. 물가와외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끈적하게 이어지는 고물가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반등의 불씨마저 꺼뜨릴까 우려스럽다. 따라서 미봉책이 아닌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안정적 물가야말로 최고의 민생 대책이다. 정부는 2%를 목표로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

江原日報

2024 03 14 ()

/ 19

미래 걸린 총선, 적극적인 참여로民意 반영해야

4·10 총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을 뽑는 본선 대진표가 전국적으로 거의 마무리됐고 강 원지역 본선 대진표도 확정됐다.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 8명 전원이 본선에 진출한 가운데 여야의 의석 쟁탈전 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 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 지형 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정초(定礎) 선거라 할 수 있 다.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 변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 정 도로 변화하고 있다.

즉,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으로 우리 사회는 대전 환기에 서 있다. 경제활 동인구는 물론 총인구

가 줄어들고 인공지능(AI)을 장착한 로봇이 노동을 대신하면서 근원적인 경제·사회 구조 개혁이 불가피 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총선은 새로운 출발점 이 돼야 한다.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사회의 구조 개혁 방향을 놓고 범국가적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에 맞춰 시의성 있는 정책을 개발 및 제시하는 게 여야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과담 정치, 진영 논리로는 대전환 시대를 준비할 수 없다. 올 총선에서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긴 안목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치열한 정책 대결을 벌이는 게 여야의 책무다. 후보자들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으로 활발히 경쟁해야

22대 국회의원 뽑는 본선 대진표 확정

과담 정치·진영논리로 대전환시대 준비 못 해

미래비전 제시·실천력 있는 후보 가려낼 때

한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대응은 여전히 안일한 무 대책이거나 타성에 젖은 정치싸움에 몰두하는 등 기대 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변화와 개혁을 추 구할 사람을 가려내야 한다. 4차 산업혁명·AI시대라 고 한다. 다른 나라에서 가능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는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 변화를 싫어하는 기득권 자들의 저항 때문에 표만 쫓는 사람들은 이들을 설 득할 생각도 안 한다. 이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

거 참여로 민의가 제대 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 다. 장밋빛으로 가득한 공약만 봐서도 안 된다.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 해서는 과거 국회에서의 발언, 표결에서 변화와

개혁을 지지했는지, 아니면 기득권에 아부만 했는지를 똑똑히 확인하자. 지역구 사업을 너무 앞세우는 후보자 들도 걸러내야 한다. 국회의원은 나라 전체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역구민의 일부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것도 지금처럼 적자 재정이 상습화 된 상황에서 다음 세대의 돈을 가지고 표를 구걸하는 것은 미래지향성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유권자의 밝은 눈으로 지역 발전을 이뤄내는 동시에 국가의 비전 을 세울 수 있는 후보를 골라내야 한다. 미래비전과 실 천력을 갖춘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총선돼야 한다. 국 가적으로 불가피한 변화와 개혁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 는 국회를 또 만든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희망이 없다.